

# “묘 파헤치고 밭 초토화”... 영광 안마도 꽃사슴 포획 본격화

### 40년간 통제 밖 번식... 약 937마리 서식 농작물 피해·산림 훼손·생활 안전 위협 국민권익위 민원→법 개정→개체수 조절

야생화된 꽃사슴으로 인한 극심한 주민 피해가 이어져 온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 올해부터 사슴 포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7일 전남도와 영광군에 따르면 농작물 훼손과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마도 꽃사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포획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 결과 안마도에는 현재 꽃사슴 약 937마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마도 꽃사슴은 1985년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방목한 10여 마리에서 시작해 40여년간 통제 없이 번식했다. 전적이 없고 섬 면적이 제한된 환경에서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일상화됐다.

사슴 무리는 마을과 농경지까지 내려와 고구마·마늘·보리 등 농작물을 삼습적으로 훼손했고 나무껍질을 벗겨 먹어 산림 고사도 잇따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묘지를 파헤치거나 돌담과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사례도 발생해 주민 불안이 커졌다. 야간에는 사슴 무리 가 도로를 점령하면서 보행자와 차량 안전

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꽃사슴은 축산법상 가축으로 분류돼 멧돼지나 고라니처럼 유해야생동물로 포획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주민들은 2022년부터 수차례 개별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접수한 결과 문제가 공론화됐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는 서식 밀도가 높아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4일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주민 피해 신청을 받아 피해 규모와 생태 여건을 고려해 포획 마릿수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개체 수 조절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마도 외에도 완도 당사도, 옹진 굴업도 등 전국의 야생화된 꽃사슴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안마도와 유사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영광/이현식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환영하는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전남시도민회는 7일 성명을 통해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스를 수 없는 지역생존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을 통해 AI(인공지능)·에너지 시대 광주전남이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이자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광주·전남이 먼저 지방 주도의 성장전략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남 시민사회단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환영”

광주·전남시도민회는 “역사적인 320만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가도록 500만 향우의 단합된 의지로 전폭적인 응원을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 체제의 실현을 뒷받침하고,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미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1300만 향우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스를 수 없는 지역생존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인 과제로 지금이 아니면 행정통합의 적기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광주·전남의 통합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대립 속에서 정체돼 왔지만 이제는 지역을 넘어 더 큰 시야

에서 통합을 다루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광주·전남이 먼저 지방 주도의 성장의 대전환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이윤리 행정통합 논의 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민에게 충실한 설명과 지속적인 소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전남여성단체협의회와 전남여성정책포럼도 광주·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역사적 결단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는 뜻을 밝혔다.

/오권철 기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광주시민들을 애매장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당국의 발굴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7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시 등은 이날부터 광주 북구 효령동 산123 일원에 위치한 공동묘지 구역에 대한 발굴 개장을 공고했다.

묘소 139기가 있는 해당 공동묘지는 31사단 소속 군장병들이 영내에 가매장한 5·18 희생자들을 민주화운동 직후 애매장한 곳으로 추정된다.

## 5·18 애매장 추정지 새롭게 발견... 광주 효령동 공동묘지 민간인 목격담·당시 군인 매장 지시 교차검증

과거 조사 과정에서 특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곳으로, 재단과 광주시는 군인들의 움직임을 직접 목격한 민간인과 당시 31사단 소속 군인들을 면담해 장소를 특정

다.

현재 해당 부지는 오랜시간 관리돼 있지 않고 수풀이 우거져 있어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시는 개장 공고 이후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나설 방침이다.

유해가 발굴될 경우 유전자정보(DNA)를 채취해 확보해둔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것과 대조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교차검증에 나선 결과 당시 복무했던 군인들 중 가매장 시신을 공동묘지로 옮기라고 지시했던 이들도 있었다”며 “애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개장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민규 기자

### 행정통합 바라보는 광주·전남 교육계, 입장차 확연 전남, 광주 근무 가능성 열려 찬성 광주, 근무지·생활권 바뀔까 우려

사해벽두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지역 정치권과 행정가의 블랙홀이 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온도차가 확연하다.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갑작스런 행정통합 흐름에 한 발 걸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광주·전남의 일선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근무환경과 생활권이 바뀔수 있다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7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사해벽두 정치권에서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양 시도교육감도 일단 통합에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속내는 복잡하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법적 요건만 마련되면 6월3일 지방선거에서 시·도교육청 통합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올바른 길이고 가야 할 길이다. 전남은 수도권 집중에 따라 계속 변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행정통합은 역사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교육통합 역시 반드시 이뤄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는 점에서 하루라도 서둘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과 만나 행정통합에 대한 교육계 의견 제시할 예정이며, 조만간 김 교육감도 면담을 할 예정이다.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통합의 밑그림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9일 예정된 대동령과 지역 국회의원, 시·

도지사 회동 결과에 따라 교육계 여론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 교육감 모두 일단 행정통합 물결에는 합류했지만, 6월3일 지방선거 통합 교육감 선출에는 고차원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김 교육감은 전남지역 대다수 교육공무원이 교육통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 교육감은 기대보다 우려가 큰 광주 교육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광주 공무원들은 40년 전 광주·전남 분리 후 광역도시인 5개 구에서만 근무하면서, 통합에 따라 전남 22개 시·군으로 근무환경이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반대로 전남 공무원들은 22개 시·군 중 광주 근교권인 화순, 담양, 나주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심지어 초임 교사와 공무원들은 전남에서 사직하고 광주에서 다시 시험을 치르기도 한다. 양 지역 공무원들의 입장차가 확연해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 교육계의 갈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공무원 수는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이 4000명 초반인데 반해, 광주시 교육청은 4배가 넘는 2만328명, 전남도교육청은 3만2987명에 달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행정통합이 이뤄지더라도 현재 처럼 양 시도 교육청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사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팽배하다.

/염선호 기자

### 참여자치21 “광주·전남 통합, 시·도민 직접 참여 거쳐야”

참여자치21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절차 과정에서 시·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인구절벽과 지방 소멸, 기후위기 시대에 광역 행정통합은 절박한 생존의 문제”라며 “다만 시도 통합은 시·도민의 생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 실질 효과와 부작용, 과정과 절차를 시·도민에게 설명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차대한 행정행위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의무”라

며 “시도지사의 합의와 요식적인 양 의회의 동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행정통합에 대해 어떤 의지나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던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임기 말에 마치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도민들은 의아하다”며 “특히 강 시장은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광주 공군항 이전과 국가 데이터퓨팅센터 유치 실패 과정에서 거친 발언 등을 볼 때 행정통합 반대론자였다. 진정 강 시장이 행정통합을 앞장서 추진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꼬집었다.

/송현근 기자

#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